

## 전 서울시장과 현 서울시장 지지자들의 투표행태에 대한 비교 연구

강해란 · 박희봉\*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갈등구조인 세대차이, 지역주의, 정치 이념 차이와 정책이슈가 투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 서울시장과 현 서울시장의 지지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연령의 절대적 효과, 즉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기각된 반면, 세대별로 겪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다양한 정치이념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둘째, 현 서울시장 지지와 전 서울시장 지지에 있어서 나타난 지역주의는 호남 지역주의이다. 본인 고향이 호남인 경우 현 서울시장은 지지하지 않는 반면, 전 서울시장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의 고향보다 부모의 고향이 호남인 경우 지역주의가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정치 이념은 전 서울시장과 현 서울시장 지지에 확실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보수적인 유권자는 현 서울시장을 지지한 반면, 진보적인 유권자는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정치 이념의 영향력이 지역주의의 영향력보다 컸다. 넷째, 진보적 이념은 진보적인 정책이슈와 관계가 높고, 보수적 이념은 보수적 정책이슈와 관련성이 높았다. 그리고 진보적 정책이슈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진보적인 전 서울시장을 지지한 반면, 보수적 정책이슈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보수적인 현 서울시장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① 향후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 세대별로 정치이념이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② 한국인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호남 지역주의 역시 퇴조할 것이며, ③ 투표행태에 정치이념의 영향력이 증가될 것이고, ④ 정책이슈가 한국인의 투표행태에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주제어:** 투표행태, 세대차이, 지역주의, 정치 이념, 정책이슈

## I. 서론

각종 선거에서 자신이 처한 위치 및 입장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선거를 포함한 개인의 가치관은 개인의 성장 및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정립되고(박희봉, 2005), 성장 후에도 개인은 일차적 비공식적 관계인 혈연, 지연, 학연에 근거한 사회 모임을 중심으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백완기, 1982). 따라서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적 배경, 정치 이념, 정책선호가 후보자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현상이다.

외국 연구에서도 정치적 가치관이 인격형성기에 수립되어(Jennings & Niemi, 1968)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Almond와 Verba(1963) 역시 한 사람의 정치적 성향과 투표성향은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고 성년이 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Brady 등(1995)은 정치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특히 시간과 돈, 시민의 역량에 따라서 정치참여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한편, Campbell 등(1980)은 미국 유권자의 성장기에 형성된 정당에 대한 친밀감과 정치적 이념에 의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인종, 성 문제 등의 다양한 집단이 정치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연구되고 있다(Shafer and Claggett 1995). 또한 같은 시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에 따라 독특한 정치적 성향이 나타난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한다(Jennings & Niemi, 1968).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가 이어지는 동시에 한국 정치의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투표행태와 관련된 연구에서 한국인은 서구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유럽에서는 소득이 낮고 학력이 낮은 계층은 사회주의 정당에 투표하고,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은 계층은 자유주의 정당에 투표하는 성향을 보이는(한정훈, 2016) 반면, 한국에서는 이와 달리 학력 및 소득이 낮은 계층이 진보적 정당에 투표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김윤실·윤종빈, 2014).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 후보에 투표한다는 의견과 연령의 고저가 아니라 세대 집단별로 각각 보수적 또는 진보적 후보를 선호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혼재되어 있다(강원택, 2003; 이현출, 2005). 둘째,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아직도 지역주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과, 지역주의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이갑윤·이현우, 2008). 셋째, 한국 역시 다른 국가와 같이 정치이념에 따라 투표하는 성향이 강하고, 정치이념의 영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현재호, 2008). 넷째, 정부정책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일부 학자는 한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지정책 및 증세문제와 같은 경제정책, 북한문제와 외교문제와 같은 이념갈등이 반영된 정책 등은 선별적으로 이해관계자의 투표성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강원택·성예진, 2018).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인의 투표행태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보적인 인사로 알려진 전 서울시장과 보수정당의 후보인 현 서울시장을 누가 왜 지지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주요 갈등구조

인 연령 및 세대, 지역주의, 정치이념, 정부정책 등의 요인이 얼마나 투표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인의 투표행태 및 성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1,000명의 서울시민에게 구조화된 설문을 받아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 II. 이론적 논의

### 1. 세대 차이와 투표행태

세대에 따라 투표 성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한국 학자와 외국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단 세대를 연령이 높고 낮음에 따라 투표성향이 다르다는 주장과, 생애주기를 거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한 세대의 특수성이 투표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첫째, Jost 등(2003)은 사람들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변화를 거부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특정 연령에 이르면 어떤 세대든 그 연령대에 합당한 유사한 행동 방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 후보를 지지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김윤실 외, 2013).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재산을 축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호하게 되어 성향이 진보에서 보수적으로 변화되고, 이러한 성향의 변화가 투표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령 차이는 이념적 성향뿐만 아니라 정책 선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강원택 외(2018)은 연령이 낮을수록 국가보안법의 철폐 내지 수정 등 진보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에 적극적이라고 하며, 연령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고 관심과 선호하는 정책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진보적인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이고, 이러한 성향은 이념적으로 차별화된 정당을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한국의 각종 선거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후보자를 선택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인 후보에 투표한다는 가설을 확인했다. 즉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20대는 박근혜 지지 34.9%, 문재인 득표율 65.1%, 30대는 박근혜 48.1% 대 문재인 51.9%, 40대는 박근혜 51.0% 대 문재인 49.0%, 50대는 박근혜 65.3% 대 문재인 34.7%, 60대 이상은 박근혜 72.3% 대 문재인 27.5%로 나타났다(노환희 외, 2013).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박근혜 지지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인 문재인 지지율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이다(강원택 외, 2018). 이것은 한국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 후보를 선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 후보를 선호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이라는 연령의 절대적 효과와 다른 주장을 한다. 즉 세대에 따라 겪은 공통적 경험이 그 세대의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박희봉·이희창(2006)은 한국은 일본 및 중국과 달리 명확한 세대 간 이

넘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다. 김재한(1998)과 강원택(2003)은 각각의 연구에서 30대가 가장 진보적이라고 지적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환희 등(2013)과 이현출(2005)은 2002년 제 16대 대선에서 386세대였던 노사모가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큰 기여를 하면서 특정 세대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또한 강원택(2005)은 30대 이하 세대는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진보적 성향이 강한 반면, 50대 이상 세대는 재벌개혁에 대해 보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음을 주장했다. 즉 특정한 세대는 자신들이 경험한 바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투표 성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 2. 지역주의와 투표행태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지역주의가 투표행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유재일(2004)은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를 가족과 혈연과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정서적·심리적 의식이 지역적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남영(2008)은 지역주의를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호감을 보이고, 타지역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두는 심리적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강원택(2003)과 조기숙(1997)은 정치적 지역주의를 지역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접근한다. 즉 강원택(2003)은 지역주의 투표현상을 원인과 관련 없이 지역 정치지도자 및 정당을 매개로 지역의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발생했다고 바라보는 한편, 조기숙(1997)은 정치적 지역주의가 단순한 저항의 표현을 넘어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고 하였다.

한국의 지역주의는 1987년에 민주적으로 이루어진 현행 헌법 개정 이후 강하게 나타났다고 한다(강원택, 2003; 유재일, 2004). 실제로 1987년 이래 한국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선거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에서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 후보가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종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나타나고 있음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편, 한국의 각종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대세인지, 아니면 지역주의가 후퇴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첫째, 1987년 이후 지금까지도 지역주의가 각종 선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젊은 세대까지도 지역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강원택(2003)과 지역주의가 가장 확실한 정당에 대한 지지기반이라는 박순애 등(2008)의 주장이다. 강원택(2003)은 한국의 정당이 지역적으로 집중된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선거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후보와 정당이 우세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대표적 지역주의는 영남과 호남이다. 김윤실 외(2013)는 영남지역에서는 보수적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고, 호남지역에서는 진보적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영남과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는 한국인의 투표행태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이남영, 2008).

실제로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광주에서 97.3%, 전남에서 94.6%, 전북에서 92.3%를 획득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광주에서 95.2%, 전남에서 93.4%, 그리고 전북에서 91.6%를 차지했다. 문재인 후보 역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에서 61.6%, 전남에서 59.9%, 전북에서 64.8%를 득표했다. 진보적 후보로 분류되는 이들 3명의 대통령은 호남에서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이다.

한편,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부산에서 73.3%, 대구에서 59.7%, 경남에서 72.3%, 경북에서 64.7%를 획득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부산에서 57.9%, 대구에서 69.4%, 경남에서 55.0%, 경북에서 72.6%를 득표했다. 또한 박근혜 후보 역시 부산에서 59.8%, 대구에서 80.1%, 경남에서 63.1%, 경북에서 80.8%를 얻었다. 즉 보수적 후보로 분류되는 3명의 대통령은 영남에서의 지지로 당선되었다.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에서도 특정 정당 후보가 해당 지역을 독식하고 있다(박희봉·이희창, 2010). 또한 수도권에서도 영남과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후보는 이 지역 출신 주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출마를 저울질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영남과 호남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충청지역에서도 그 지역주의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각 선거 후보자들은 지역적 연고를 선거전략을 사용하고 있고(조기숙 1997), 그 결과는 다수의 실증연구에서 검증되고 있다(이남영, 2011).

둘째, 지역주의가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지만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며, 지역주의뿐만 아니라 정치이념과 같은 다른 변수가 투표행태에 점차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재일(2004)은 2000년 제16대 총선과 2002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약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욱(2004) 역시 영남, 호남, 충청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지역주의가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박명호(2004)도 2004년 17대 총선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해졌으며 지역주의의 퇴조를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주의가 퇴조하는 한편 세대와 정치이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최준영 등(2005) 역시 정치이념과 세대차이가 선거행태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주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한편, 문우진(2005)은 한국에서의 지역주의와 정치이념이 중첩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호남에서는 진보적 성향이 지역주의와 결합되고, 영남에서는 보수주의와 지역주가 결합되고 있다는 것이다(강원택, 2003; 박희봉·이희창, 2010).

### 3. 정치이념과 투표행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에서 유권자의 정치이념은 투표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Converse(1964)는 개인의 정치적 이념이 투표행태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행태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가깝거나 방향성이 일치하는, 즉 생각을 같이 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Merill & Grofman, 1999)는

것이다. 이에 따라 Lipset 등(1967)은 정치적 이념이란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주장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호(2008)는 한국 사회의 정치이념 역시 서구적 의미의 계급 및 계층 갈등, 즉 좌-우 이념대립 차원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경미(2009)는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그리고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채장수(2009)는 한발 더 나아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진보-보수는 좌파-우파와는 상호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진보는 좌파, 보수는 우파와 동일시한다며 비판했다. 물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그리고 우파로 분류되는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 및 투표 성향이 공통적이고, 사회주의와 진보주의, 좌파로 인식되는 집단의 정치적 태도와 투표 성향이 일치되는 경향은 부인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의 정치이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잣대로 일반적으로 많이 논의 되어 온(황윤원 외 2012; 강원택 2003; 박종민, 2008) 진보와 보수의 성격이 우선 논의될 필요가 있다. 진보는 보통 좌파로 표현되기도 하며, 평등주의적 가치, 서민복지의 강화, 그리고 북한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등으로 구분된다. 반면, 보수는 우파로 불리기도 하고 자유주의 또는 친시장주의, 성장위주 또는 권위주의, 반공이념 강화 등과 관련짓기도 한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한국의 정치이념을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선거에서 정치적 이념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약해지고 있는가이다. 다수의 학자들(이갑윤·이현우, 2008; 강원택, 2005)은 1990년대 후반부터 각종 선거에서 이념 성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이내영, 2009). 유권자의 개인적 성향이 보수적인 유권자는 보수적인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고,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는 진보적인 후보 및 정당을 선택한다는 것이다.(김윤실 외, 2013). 2000년대에는 선거에서 이념적 색채가 더 강해지면서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에서는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대립이 강화되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 이념적 변화가 과거 보수에서 진보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이내영·허석재, 2010). 따라서 다수의 학자들(최준영·조진만 2005 이갑윤·이현우 2008; 이내영 2009; 이내영·허석재 2010)은 한국인의 투표행태 영향요인이 지역주의에서 정치이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7년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이념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강원택 등(2018)은 2017년 대선에서 정치이념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김윤실 외(2014)는 17대 대선에서 한국 유권자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종 한국 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이념이 1990년대 이후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이갑윤·이현우, 2008),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이 계속 발휘하고 있는지를(김욱 2004; 이내영 2009) 밝혀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2017년 대선 이후 한국인

의 정치행태 영향요인이 정치이념에서 경제이슈 등 다른 요인이 정치이념을 대체하고 있는지, 또는 정치이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지(이내영, 2009), 나아가 이갑윤 등(2008)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권자의 정치이념이 정치행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4. 정부정책과 투표행태

정부정책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구 모두 의견이 다양하게 나뉜다. Campbell 등(1980)은 미국 유권자의 12%만이 자신의 정치이념과 관련된 정책 이슈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보인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 채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현지(2003)는 한국인 역시 보수와 진보라는 자신의 정치이념과 경제·사회정책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내영 등(2007)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주관적 계급정체성과 주요 정책이슈를 일관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고 심지어 혼동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주찬 등(2003)은 한국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책을 미리 결정하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미리 결정한 후에 그 후보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각종 선거에 있어서 정부정책은 후보자 및 정당 지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경제·사회적 배경 및 정치적 이념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 이슈가 다르고, 이러한 정책선호가 선거에 반영된다고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송건섭·이부희 2008; 윤종빈 2007), 소속 정당(송건섭 2004), 후보자의 공약과 쟁점(송근원 2007)을 보고 투표에 임한다는 것이다. 즉 유권자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이념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평가한 후 투표에 임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은 우선 경제이슈이다. 보수적일수록 재벌 개혁 및 기업규제를 반대하는 성향을 보이며(강원택, 2003; 이현출, 2005; 조성대, 2008), 진보적일수록 경제민주화에 호의를 보인다고 한다(고원, 2014).

다음으로 외교 및 국방 이슈이다. 보수적인 유권자일수록 국방비 지출 증대에 찬성하고(조성대, 2008; 고원 2014), 북한 정권에 대해 대립적인 입장을 보이며(강원택·성예진, 2018; 김무경·이갑윤, 2005)),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이현출, 2005), 대미관계 원활화 및 대중관계에 거리두기를 선호한다고(어수영, 2004) 한다.

한편, 진보적인 유권자는 일반적으로 정부역할의 확대에 찬성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박종민 외, 2008). 구체적으로 이들은 복지, 환경, 보건, 교육,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에 찬성하고(조성대, 2008; 이병재, 2020; 김주찬·윤성미, 2003), 고용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재정지출 증대를 지지한다는(박종민, 2008) 것이다.

유권자의 정책선호에 따른 정치행태는 정부의 정책평가와 연계된다는 주장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권자가 특정 정부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 Citrin 등(1986), Hetherington(1998)은 현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은 현정부와 관련된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Gershtenson 등(2006)도 미국인의 정책선호와 정부에 대한 지지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밝혔다. Miller 등(1991)은 정부를 지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정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광호 외(2011) 역시 특정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기관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민의 요구와 관련된 정부성과의 평가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이내영·정한울(2007)이 주장하듯이 현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과 경제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대통령과 같은 정당 출신의 후보자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즉 이들은 전반적인 현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 Ⅲ. 분석틀

#### 1. 가설 및 연구모형

이상의 기존 연구 결과는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인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연령, 지역주의, 정치이념, 정부정책 등 4개 요인이 있으며, 이들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의견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연령, 즉 세대에 따른 투표행태가 다르다는 논의이다. 일부 학자는 나이가 적을 때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다가 연령이 높아지면 보수적인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학자는 각 세대마다 특수한 경험을 한 까닭에 각 세대별로 특징적인 투표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세대별로 특수한 경험을 하는 만큼 연령 구간별로 진보 또는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세대별 차이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20대와 30대 세대는 중도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고, 30대와 40대는 진보적 후보를 지지하며, 60대 이상의 유권자는 보수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둘째, 지역주의가 투표행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학자는 한국의 지역주의가 각종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고, 이러한 지역주의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 젊은 세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설정했다.

가설 2: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지역주의이다. 그리고 부모의 지역주의는 자식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일부 학자는 한국에서 지역주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역주의뿐만 아니라 정치이념이 투표행태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정치이념의 차이에 따른 이념갈등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3를 설정했다.

가설 3: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지역주의보다 정치 이념이 더 중요한 요인이다.

넷째, 정치이념과 정책이슈에 관한 논의이다. 즉 유권자의 정치이념이 경제정책, 외교 및 국방정책, 정부역할 확대 등 각종 정책과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가이다. 또한 각종 정책이슈는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한편, 현정부의 정책평가가 선거에 반영된다는 논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 4를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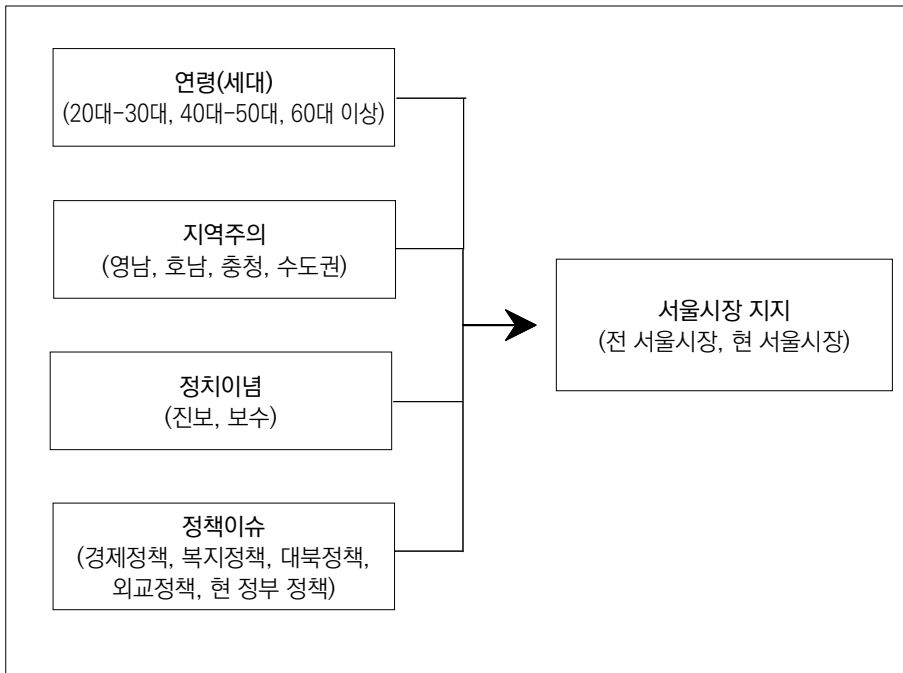
가설 4-1: 진보적인 유권자는 진보적인 정책이슈에 호감을 보이며, 보수적인 유권자는 보수적인 정책이슈에 호감을 보인다.

가설 4-2: 진보적 정책이슈에 호감을 보이는 유권자는 진보적인 후보를 지지하고, 보수적 정책이슈에 호감을 보이는 유권자는 보수적인 후보를 지지한다.

가설 4-3: 현정부정책에 우호적인 유권자는 여당 후보자를 지지하고, 현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유권자는 야당 후보자를 지지한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 및 가설에 따라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으로 정리된다. 즉 독립변수는 연령(세대), 지역주의, 정치이념, 정책이슈 등 4개이며, 종속변수는 지방선거 후보의 지지이다.

〈그림 1〉 연구모형



## 2.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전임 서울시장과 현 서울시장의 지지도이다. 지지 여부는 “예”와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한편, 종속변수는 연령, 지역, 정치이념, 정책이슈로 구분하였다. 우선 연령은 2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으로 일단 구분하였고, 연령의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30대 이하, 40대-50대, 60대 이상 등 3개 연령대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지역주의는 본인의 지역주의와 부모의 지역주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인 및 부모의 지역주의는 각각 수도권, 호남, 영남, 충청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인 및 부모의 지역주의 두 가지 중에서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를 변수로 취급하였고, 지역주의만을 살펴볼 때는 두 가지 중에서 효과가 큰 지역주의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정치이념 변수는 보수에서 진보로 구분하였다. 현실적으로 극보수 “1”로부터 극진보 “10”까지 10단계로 나누어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측정하였다. 필요한 경우 응답자의 빈도수를 고려하여 1부터 4까지는 보수, 5와 6은 중도, 7에서 10까지는 진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정책이슈는 기존 연구의 논점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복지정책, 외교정책, 대북정책 등 4개 분야별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추진정책을 현 정부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경제

정책으로는 세금 감소, 기업규제 완화, 정부의 시장개입 완화, 경제성장 위주 정책 등 4개 설문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개 경제관련 정책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어,<sup>1)</sup> 4개 정책의 평균값을 경제정책으로 명명하였다.

〈표 1〉 변수 및 측정항목

변수		측정항목
정치적 지지		2021년 보궐 지방선거에서 현 서울시장 지지,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전 시장 지지
연령(세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지역주의	부모의 고향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 기타 (강원, 제주 등)
	본인의 고향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 기타 (강원, 제주 등)
정치 이념		보수에서 진보 (10점 척도)
정책이슈	경제정책	세금 감소, 기업규제 완화, 정부의 시장개입 완화, 경제성장 위주
	복지정책	복지증가, 노동조합 지지, 보편적 복지, 부동산 증세
	외교정책	북한 핵무기 폐기, 한미동맹
	대북정책	개성공단 재가동, 국가보안법 폐지, 전시작전권 이양, 미군철수, 대북지원
	현정부정책	코로나 재난지원금, 과거사 조사, 무상급식, 대북정책, 청년수당, 부동산 정책, 대통령 국정운영지지

복지정책으로는 복지증가, 노동조합 강화, 보편적 복지, 부동산 증세 등 4개 설문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개 정책을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어,<sup>2)</sup> 4개 정책의 평균값을 복지정책으로 명명하였다.

안보 및 외교에 관한 설문인 개성공단 재가동, 국가보안법 폐지, 전시작전권 이양, 미군철수, 대북지원, 북한 핵무기 폐기, 한미동맹 강화 등 7개를 확인적 요인분석한 결과 두 개의 요인으로 분류였다. 개성공단 재가동, 국가보안법 폐지, 전시작전권 이양, 미군철수, 대북지원 등 같은 요인으로 분류된 5개 대북관련 사항은 대북정책으로 명명하였고,<sup>3)</sup> 북한 핵무기 폐기와 한미동맹 등 2개 외교관련 사항은 외교정책으로 명명하였다.<sup>4)</sup>

마지막으로 현정부정책은 코로 재난지원금, 과거사 조사, 무상급식, 대북정책, 청년수당, 부동산 정책, 대통령 국정운영지지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얼마나 우호적으로

1) 경제정책의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는 세금 감소 0.735, 기업규제 완화 0.807, 정부개입 완화 0.731, 경제성장 우선 0.762이다.  
 2) 복지정책의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는 복지증가 0.760, 노동조합 지지 0.681, 보편적 복지 0.683, 부동산 증세 0.745이다.  
 3) 대북정책의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는 개성공단 재가동 0.760, 국가보안법 폐지 0.754, 전시작전권 이양 0.691, 미군 철수 0.647, 대북지원 0.813이다.  
 4) 외교정책의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는 북한 핵무기 폐기 0.879, 한미동맹 강화 0.724이다.

지지하는가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7개 정책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현 정부정책으로 명명하였다.<sup>5)</sup>

### 3. 표본 추출

〈표 2〉 설문 응답자의 개인적 속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609	61.7	학력	중졸이하	29	2.9
	여성	378	38.3		고졸	180	18.0
연령	20대 이하	46	4.6		전문대졸	107	10.7
	30대	127	12.7		대졸 이상	684	68.4
	40대	237	23.7		종교	무종교	428
	50대	326	32.6	불교		157	15.7
	60대 이상	260	26.0	개신교		254	25.4
소득	200만원 미만	59	5.9	가톨릭		139	13.9
	200-300만원	138	13.8	기타		18	1.8
	300-500만원	319	31.9				
	500만원 이상	335	33.5	결혼 상태	기혼	752	75.2
	1000만원 이상	129	12.9		미혼, 기타	248	24.8

본 연구를 위한 종속변수인 투표행태는 전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도와 현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연령(세대)와 지역주의, 정치이념, 정책이슈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연령(세대)는 20대부터 7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이를 20대-30대, 40대-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지역주의는 본인의 고향뿐만 아니라 부모의 고향을 구분하여 한국인의 지역주의를 추적하여 측정하였다. 정치이념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정치이념을 보수에서 지보로 10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이를 보수와 중도, 진보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이슈는 경제, 안보, 외교, 정부확대, 현정부정책 등 5가지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정책은 해당되는 세부 정책을 요인분석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을 위한 모집단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고 투표권을 보유한 만18세 이상의 성인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설문이 여의치 않음을 고려하여 무료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 1,000명의 개인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5) 현 정부정책의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0.738, 과거사 조사 0.779, 무상급식 0.698, 대북정책 0.844, 청년수당 0.689, 부동산 정책 0.712, 대통령 국정운영지지 0.875이다.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까닭에 남성(61.7%)이 여성(38.3%)의 비율보다 높았고, 학력으로는 대졸 이상(68.4%)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점, 그리고 연령대에 있어서 20대(4.6%), 30대(12.7%)의 비율이 낮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 IV. 분석 결과

〈표 3〉은 연령이 현직 및 전직 서울시장 지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연령뿐만 아니라 학력, 소득, 성별 등 사회경제적 배경을 독립변수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 서울시장 지지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R<sup>2</sup>)은 1.0%, 전 서울시장 지지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R<sup>2</sup>)은 0.8%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현 서울시장 지지의 경우는 연령을 포함한 학력, 소득, 성별 등 모든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가 통계적 의미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 서울시장 지지에 있어서는 연령만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현 서울시장 지지는 연령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전 서울시장 지지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3〉 연령의 서울시장 지지 효과

독립변수	현 서울시장 지지	전 서울시장 지지
연령	.084	-.071*
학력	.041	-.030
소득	.016	-.016
성별	.034	-.030
R <sup>2</sup>	.010	.008
F	2.32	1.88

\*\*\*p < .001, \*\*p < .01, \*p < .05

한편, 〈표 4〉는 공통적 경험을 겪은 동일한 세대에 따라 서울시장 지지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교차분석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현 서울시장은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66.4%가 지지하였고, 20대-30대에서 55.3%가 지지한 반면, 40대-50대는 49.0%만이 지지하였다. 한편, 전 서울시장은 40대-50대의 50.5%가 지지한 반면, 20대-30대는 34.7%가 지지하였고, 60대 이상은 25.7%만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60대 이상은 보수적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 40대-50대는 진보적 후보를 지지하고, 20대-30대는 다소 보수적 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연령별 서울시장지지 비교

		현 서울시장 지지		전 서울시장 지지	
		빈도(%)	$\chi^2$	빈도(%)	$\chi^2$
연령	20대 - 30대	94(55.3)	29.72**	60(34.7)	48.63**
	40대 - 50대	268(49.0)		282(50.5)	
	60대 이상	164(66.4)		66(25.7)	
합계		526(54.6)		408(41.3)	

\*\*\*p &lt; .001, \*\*p &lt; .01, \*p &lt; .05

〈표 5〉 본인 지역주의의 서울시장 지지 효과

독립변수	현 서울시장 지지	전 서울시장 지지
연령	.104**	-.099**
학력	.032	-.009
소득	-.067	-.012
성별	.021	-.049
본인 호남	-.131**	.253***
본인 영남	.032	-.071
본인 충청	.028	.013
본인 수도권	.064	-.020
R <sup>2</sup>	.030	.077
F	4.50***	10.75***

\*\*\*p &lt; .001, \*\*p &lt; .01, \*p &lt; .05

〈표 5〉는 본인의 지역주의를 살펴보기 위해 본인의 고향이 서울시장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연령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본인의 고향을 독립변수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 서울시장 지지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R<sup>2</sup>)은 1.0%에서 3.0%로 2% 증가하였고, 전 서울시장 지지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R<sup>2</sup>)은 0.8%에서 7.7%로 6.9% 증가하였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현 서울시장 지지의 경우는 연령과 호남지역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전 서울시장 지지에 있어서도 연령과 호남지역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현 서울시장 지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고, 본인의 고향이 호남인 유권자의 경우는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전 서울시장 지지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본인 고향이 호남인 유권자일 경우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6〉 부모 지역주의의 서울시장 지지 효과

독립변수	현 서울시장 지지	전 서울시장 지지
연령	.100**	-.092**
학력	.031	-.013
소득	-.064	-.013
성별	.036	-.058
본인 호남	-.111	.082
본인 영남	.016	-.075
본인 충청	.043	-.050
본인 수도권	.128	-.090
부모 호남	-.326***	.248***
부모 영남	-.008	.042
본인 충청	-.050	.121*
부모 수도권	-.048	.085
R <sup>2</sup>	.065	.095
F	6.29***	9.15***

\*\*\*p < .001, \*\*p < .01, \*p < .05

〈표 6〉은 부모의 지역주의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고향이 서울시장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연령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본인의 고향에 부모의 고향을 독립변수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 서울시장 지지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R<sup>2</sup>)은 3.0%에서 6.5%로 3.5% 증가하였고, 전 서울시장 지지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R<sup>2</sup>)은 7.7%에서 9.5%로 1.8% 증가하였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현 서울시장 지지의 경우는 연령과 부모의 호남지역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전 서울시장 지지에 있어서도 연령과 부모의 호남지역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현 서울시장 지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고, 부모의 고향이 호남인 유권자의 경우는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전 서울시장 지지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부모의 고향이 호남인 유권자일 경우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부모의 고향 변수를 추가한 결과 본인의 고향 변수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즉 본인의 지역주의는 부모의 지역주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7〉은 정치 이념이 서울시장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연령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부모의 고향에 정치 이념을 독립변수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 서울시장 지지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R<sup>2</sup>)은 6.5%에서 15.6%로 9.1% 증가하였고, 전 서울시장 지지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R<sup>2</sup>)은 9.5%에서 18.6%로 9.1% 증가하였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현 서울

시장 지지의 경우는 부모의 호남지역과 정치 이념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전 서울시장 지지에 있어서도 부모의 호남지역과 정치 이념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현 서울시장 지지는 부모의 고향이 호남인 유권자의 경우는 낮고, 보수적인 유권자일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전 서울시장 지지는 부모의 고향이 호남인 유권자일 경우 높고, 진보적인 유권자일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정치이념의 효과가 호남 지역주의 효과보다 현 서울시장 및 전 서울시장 모두 더 크게 나타났다.

〈표 7〉 정치 이념의 서울시장 지지 효과

독립변수	현 서울시장 지지	전 서울시장 지지
연령	.059	-.046
학력	.026	-.013
소득	-.053	-.029
성별	.017	-.047
부모 호남	-.163***	.220***
부모 영남	-.026	.013
부모 충청	-.018	.080*
부모 수도권	-.001	.060
정치 이념	-.324***	.332***
R <sup>2</sup>	.156	.186
F	19.56***	24.53***

\*\*\* $p < .001$ , \*\* $p < .01$ , \* $p < .05$

〈표 8〉은 정치 이념과 정책 이슈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관계 결과이다. 정책이슈 간에도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정치 이념과 정책이슈 간에도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기존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경제정책, 복지정책, 대북정책, 국방정책 등의 정책이슈는 모두 정치 이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정치 이념과 정책이슈 간의 상관관계

변수	(2)	(3)	(4)	(5)	(6)
정치이념 (1)	-.494**	.438**	.568**	-.306**	.580**
시장경제 (2)		-.604**	-.644**	.447**	-.623**
복지강화 (3)			.626**	-.329**	.629**
대북우호 (4)				-.492**	.724**
국방강화 (5)					-.356**
현정부정책 (6)					-

\*\* $p < .01$ , \* $p < .05$

〈표 9〉는 다양한 정책이슈 중에서 어떤 정책이슈가 정치 이념의와 관계가 높은지를 살펴



보기 위해 정책이슈와 정치 이념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5개의 정책이슈가 정치 이념에 미치는 전체 설명력(R<sup>2</sup>)은 36.2%로 나타났다. 정책이슈의 t값은 시장경제와 대북정책, 현 정부정책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시장경제를 선호하는 유권자일수록 보수적이며, 대북우호정책을 선호하는 유권자는 진보적이고, 현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일수록 진보적임을 알 수 있다.

〈표 9〉 정책이슈의 정치 이념 효과

독립변수	정치이념
시장경제	-.152***
복지강화	.034
대북우호	.196***
국방강화	-.029
현 정부정책	.288***
R <sup>2</sup>	.362
F	109.24***

\*\*\*p < .001, \*\*p < .01, \*p < .05

〈표 10〉은 다양한 정책이슈가 서울시장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연령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고향, 정치 이념에 정책이슈를 독립변수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 서울시장 지지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R<sup>2</sup>)은 15.6%에서 21.3%로 5.7% 증가하였고, 전 서울시장 지지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R<sup>2</sup>)은 18.6%에서 26.7%로 8.1% 증가하였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현 서울시장 지지의 경우는 부모의 호남지역과 정치 이념, 시장경제, 현 정부정책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전 서울시장 지지에 있어서는 부모의 호남지역과 정치 이념, 대북우호정책과 현 정부정책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현 서울시장의 지지도는 부모의 고향이 호남인 유권자의 경우는 낮고, 보수적인 유권자일수록 높으며, 시장경제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일수록 높고, 현 정부정책을 지지할수록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전 서울시장 지지는 부모의 고향이 호남인 유권자일 경우, 진보적인 유권자일수록, 대북우호정책을 지지할수록, 현 정부정책을 지지할수록 높다고 할 수 있다. 현 서울시장과 전 서울시장은 정당이 다른 만큼 전혀 다른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정책이슈의 서울시장 지지 효과

독립변수	현 서울시장 지지	전 서울시장 지지
연령	.021	-.015
학력	.023	-.018
소득	-.068	-.033
성별	-.003	-.044
부모 호남	-.134***	.152***
부모 영남	-.041	.020
부모 충청	-.024	.071
부모 수도권	.002	.046
정치 이념	-.189***	.162***
시장경제	.211***	-.005
복지강화	.053	-.025
대북우호	-.009	.137**
국방강화	.027	-.046
현 정부정책	-.104*	.215***
R <sup>2</sup>	.213	.267
F	16.63***	22.83***

\*\*\*p < .001, \*\*p < .01, \*p < .05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인 세대차이, 지역주의, 정치이념과 정책이슈가 투표행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 서울시장과 현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논의 및 결과를 고려하여 이를 한국인의 다양한 투표행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연령의 절대적 효과, 즉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일부 학자들이 주장은 기각된 반면, 세대별로 겪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다양한 정치 이념을 나타낼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즉 20대와 30대 세대는 중도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고, 30대와 40대는 진보적 후보를 지지하며, 60대 이상의 유권자는 보수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가설 1〉이 확인되었다. 60대 이상은 청년기에 경제발전을 겪고, 그 혜택을 입은 세대로서 보수적 성향을 보유하게 된 반면, 40대와 50대는 20대 및 30대 청년기에 민주화 전환기를 겪으면서 극심한 사회갈등을 겪은 바 진보성향이 내재된 세대로 판단할 수 있다. 20대와 30대는 현재 청년기를 보내면서 윗세대의 세대갈등을 경험하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학습하고 있기에 대체로 중도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역주의, 특히 부모의 지역주의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가설 2〉는 일부 받아들일 수 있었다. 분석 결과, 현 서울시장 지지와 전 서울시장 지지에 있어서 나타난 지역주의는 호남

지역주의이다. 본인 고향이 호남인 경우 현 서울시장은 지지하지 않는 반면, 전 서울시장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것은 본인의 고향보다 부모의 고향이 호남인 경우 이러한 지역주의는 더욱 심화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영호남 모두 지역주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호남에서만 지역주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향후 지역주의가 더욱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이념이 지역주의를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가설 3>의 검증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정치 이념은 현 서울시장 및 전 서울시장 지지에 확실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보수적인 유권자는 현 서울시장을 지지한 반면, 진보적인 유권자는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정치 이념의 영향력이 지역주의의 영향력보다 컸다. 이것으로 투표성향이 지역주의에서 정치 이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앞에서 밝혔듯이 영남 및 충청권 지역주의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투표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역주의에서 정치 이념 위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정책이슈 간의 관계를 살펴본 <가설 4>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가설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진보적 이념은 진보적인 정책이슈와 관계가 높고, 보수적 이념은 보수적 정책이슈와 관련성이 높았다. 그리고 진보적 정책이슈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진보적인 전 서울시장을 지지한 반면, 보수적 정책이슈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보수적인 현 서울시장을 지지하였다. 특히 진보적인 현정부정책에 우호적인 유권자는 전 서울시장을 지지한 반면, 현 서울시장은 지지하지 않았다. 또한 현정부정책에 대한 지지성향이 현 서울시장 및 전 서울시장 지지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한국인의 투표행태가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이라는 기존의 연령 효과는 줄어드는 반면, 각 세대에 따라 정치이념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 결과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 세대별로 정치이념이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둘째, 지역주의가 투표행태에 영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호남이외의 지역에서는 지역주의가 사라졌다. 그리고 호남 지역주의 역시 본인의 지역주의에 의해 발견되기보다는 부모의 지역주의에 기인한다. 이것은 한국의 지역주의는 최소한 한 세대 이상 더 진행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세월이 더 흐르면 자연스럽게 호남 지역주의 역시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표에 있어서 정치이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보수적인 유권자는 보수적 인물 또는 정당에, 진보적인 유권자는 진보적 인물 또는 정당에 투표하고 있다.

넷째, 기존 연구에서 간과했던 투표행태 영향요인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정책이슈가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것은 정책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정책을 당선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인지하여 정책선거가 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정책이슈에 따라

유권자들의 지지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치이념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서 투표행태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인의 투표행태에 있어서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 한 번의 결과만으로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충분히 밝혔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의 문제, 내적타당도, 외적타당도, 구성타당도, 통계적 타당도 등 통계적 엄밀성을 고려해야 향후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연구 결과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책선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를 점검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원택(2003). 한국 정치의 이념적 특성: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정당학회보」. 2(1): 5-30.
- 강원택(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2): 193-217.
- 강원택·성예진(2018).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과 세대: 보수 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연구」. 27(1): 205-239.
- 고원(2014). 2012년 대통령선거의 정치프레임 전략에 관한 연구: '강한 어머니'와 '자상한 아버지'의 프레임 대결. 「사회과학연구」. 26(2): 105-130.
- 김경미(2009).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론적 좌표설정 모색. 「정치정보연구」. 12(1): 45~60.
- 김무경·이갑윤(2005). 한국인의 이념정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13(2): 6-32.
- 김상돈·정윤태(2017). 정치성향과 계층귀속감,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가 경제생활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공공사회연구」. 7: 128-156.
- 김욱(2004). 한국 지역주의의 지역별 특성과 변화 가능성: 대전충청지역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4(1): 83-105.
- 김윤식·윤종빈(2014). 한국 유권자의 이념과 후보 선택: 16대·17대·18대 대선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26(2): 119-141.
- 김윤실·박병훈·윤종빈(2013). 어떤 유권자가 투표하는가? - 제18대 및 제19대 총선 분석. 「한국 시민윤리학회보」. 26(1): 143-171.
- 김재신·임재형(2013). 대학생의 투표행태에 나타난 보수와 진보의 이념갈등: 19대 총선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6(2): 61-87.
- 김재한(1998). 「합리와 비합리의 한국 정치사회」. 서울: 소화.
- 김주찬·윤성이(2003).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념성향이 투표에 미친 영향. 「21세기정치학회보」. 13(2): 87-103.

- 김희민·송두리·성예진(2017). 한국인들은 무엇으로 민주주의를 평가할까? 「현대정치연구」, 10(2): 99-129.
- 길승흡(1992). 한국인의 정치의식구조변화: 1963-1993년. 「한국정치학회보」, 26(3): 3133-3152.
- 노환희·송정민·강원택(2013).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2(1): 113-140.
- 문우진(2009). 지역주의와 이념성향: 17대 총선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8(1): 87-113.
- 박명호(2004). 17대 총선과 정당정치의 변화: 지역주의 정당체제와 관련하여. 「정치정보연구」, 7(1): 1-16.
- 박순애·유미년(2008).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요인에 관한 연구: 이념, 가치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4): 199-237.
- 박종민(2008).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42(4): 269~288.
- 박희봉·신중호·황윤원(2013). 정부실패의 요인: 정부정책인가? 정치태도인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1): 465-493.
- 박희봉·이희창(2006). 세대별 정치 이데올로기 차이: 한·중·일 3국의 시민의식 비교.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1): 125-150.
- 박희봉·이희창. (2010). 한국 대학생의 지역주의: 지역별 가치관, 정치이념, 그리고 정치참여. 「한국정책연구」, 10(3): 157-174.
- 박희봉(2005). 개인의 가치가 정부신뢰와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 3국의 시민의식 비교. 「한국행정연구」, 14(4): 1-24.
- 송건섭·이부희(2008).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5-30.
- 송건섭(2004). 유권자의 투표행태 연구: 6·13 지방선거와 4·15 총선 비교. 「지방정부연구」, 8(3): 215-235.
- 송근원(2007). 16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정책입장과 투표행태. 「21세기정치학회보」, 17(1): 45-70.
- 신정섭(2019)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난 복지회고투표: 이념, 소득, 연령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3(1): 85-104.
- 안용훈(2013). 투표선택, 정치제도, 그리고 민주주의: 2012년 총선과 대선의 투표행태와 연관성 분석. 「평화연구」, 21(1): 215-246.
- 어수영. (2004). 가치변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1990-2001년간의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8(1): 193-215.
- 유재일(2004). 지역주의 정치지형의 동태와 과제. 「정치정보연구」, 7(2): 135-159.
- 윤종빈(2007). 2007 대선과 수도권 투표성향: 지역, 이념, 그리고 인물. 「한국정당학회보」, 6(2): 65-95.
- 이갑윤·이현우(2008). 이념투표의 영향력 분석: 이념의 구성, 측정 그리고 의미. 「현대정치연구」, 1(1): 137-166.
- 이남영. (2011). 중앙정치 갈등의 표출로서의 지방선거: 지역, 이념, 정당갈등을 중심으로. <평

- 화학연구」. 12(4): 219-240.
- 이남영(2008). 지역주의와 세대갈등: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9(3): 283-305.
- 이내영·허석재(2010). 합리적인 유권자인가, 합리화하는 유권자인가: 17대 대선에 나타난 유권자의 이념과 후보 선택. 「한국정치학회보」. 44(2): 45-67.
- 이내영(2009).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의 변화와 이념투표. 「평화학연구」. 17(2): 42-72.
- 이내영·정한울(2007). 이슈와 정당지지의 변동. 「한국정치학회보」. 41(1): 31-55.
- 이병재(2020). 한국 선거에서 나타난 이슈 대중의 특성과 투표 성향: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의 경우. 「21세기정치학회보」. 30(4): 111-135.
- 이현지. (2003). 정치적 이념의 형성과 가치변화: 16대 대선에 나타난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 제7호: 125~148
- 이현출(2005). 한국 국민의 이념성향: 특성과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9(2): 321-343.
- 장승진(2020). 보수적이지 않은 보수주의자와 진보적이지 않은 진보주의자: 이념성향, 정책선호, 그리고 가치 정향. 「한국정당학회보」. 19(1): 129-156.
- 장훈(2004). 한국 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 과제: 진보-자유지상주의의 등장과 한국 민주주의의 압축이동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발표논문집」.
- 정광호·이달곤·하혜수(2011). 지방정부 신뢰요인 탐색. 「한국행정학보」. 45(4): 181-202.
- 조기숙(1997). 지역주의 논쟁 ; 비판이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31(2): 203-232.
- 조성대(2008). 균열구조와 정당체계: 지역주의, 이념, 그리고 2007년 한국 대통령선거. 「현대정치연구」. 1(1): 169~198.
- 지병근(2020). 호남 유권자의 이념 정향과 정당 선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험적 분석. 「시민사회와 NGO」. 18(2): 41-81.
- 진영재·김민욱(2007). 한국인의 이념성향 인식과 후보자 및 정당지지 행태와의 상관관계: 16대 대통령선거와 17대 국회의원선거 비교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59: 65-98.
- 채장수(2003). 한국 사회에서 좌파 개념의 설정. 「한국정치학회보」. 37(2): 219 ~238.
- 최준영·조진만(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3): 375-394.
- 한정훈. (2016).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 「한국정치학회보」. 50(4): 105-126.
- 현재호(2008).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갈등: 정치적 대표체제로서의 정당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4): 213~241.
- 황윤원·신중호·박희봉(2012). 누가 어떤 정부정책을 선호하는가? 보수와 진보의 이념가치인가? 「한국정책학회보」. 21(1): 1-28.
- Almond, G. A. & Verba, S.(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rady, H. E., Verba, S., & Scholzman, K. L.(1995). Beyond SES ;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271-294.

- Campbell, A., P. E. Converse, W. E. Miller, D. E. Stokes.(1980). *The American Vot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itrin, Jack, & Donald Philip Green.(1986).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Resurgence of Trust in Governm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 143-53.
- Converse, P. E.(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 in Mass Publics. *Critical Review*. 18(1-3): 1-74.
- Gershtenson, Joseph, Jeffrey Ladewig, & Dennis L. Plane.(2006). Parties, Institutional Control, and Trust in Government. *Social Science Quarterly*. 87(4): 882-902.
- Hetherington, Marc J.(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Jennings, M. K. & Niemi, R. G.(1968). The Transmission of Political Values from Parent to Chil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1): 169-184.
-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 Sulloway, F. J.(2003).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3): 339-375.
- Knight, Kathleen.(2006). Transformations of the Concept of Ide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0(4): 619- 626
- Lipset, Samuel and Stein Rokkan.(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In Lipset and Rokkan,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New York: Macmillan: 1-64.
- Miller, A. & S. Borrelli.(1991). Confidence in Government during the 1980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4): 147-173.
- Merrill, S. & Grofman, B.(1999). *A Unified Theory of Vot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fer, B.E. & Claggett, W. J. M.(1995). *The Two Majorities ; The Issue Context of Modern American Politic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 강혜란(姜慧玢):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angiekang@naver.com).

\* 박희봉(朴熙峯): 미국 Temple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Citizen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in the Process of Local Autonomy of Korea, 1994),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회자본, 정부조직, 행정문화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저서로는 「사회자본」(2009), 「좋은 정부, 나쁜 정부」(2013), 「교과서가 말하지 않은 임진왜란 이야기」(2014), 「5800 진주성 결사대 이야기」(2019), 논문으로는 “노인의 삶의 만족 영향요인”(2020), “조선정부의 임진왜란 대응 및 역할”(2020), “의료 인공지능의 융성 및 공공성을 위한 정책 제안”(2021) 등을 발표하였다. 주요경력으로 현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맡고 있다(hbpark@cau.ac.kr).

논문투고일: 2021.11.30 / 심사일: 2021.12.6 / 게재확정일: 2021.12.18